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 · 적법 세금 · 성공 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 taxpark.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0/ 9/ 23 통권 1485호

CEO · CFO · COO · 회계책임자 · 조세전문가 · 재정실무자 · 총무담당자 ·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税計經營戰略

### CEO 에세이 - 이해악원장

발렌베리 가문이 존경받는 이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 박윤중 회계사 :

2020년 8월에 개정된 다주택 등의 취득세 요약(행정  
안전부 요약 내용)

### CFO · 회계실무자 · 조세전문가 정보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  
하세요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CMO · 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흡수합병하면 합병법인의 전체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p.14)

< 주택과 아파트, 일반 부동산의 개인별 주택보유숫자에 따른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10% 또는 농특세 10% 추가)>

개념구분		취득자의 주택취득 전 기존 보유상태			
		(첫 주택)	1(2주택째)	2(3주택째)	3(4주택째)
비주택	주택 아닌 일반부동산 (개인법인)	4%	4%	4%	4%
	농지 취득인 경우	3% (상속 2.3%)	3% (상속 2.3%)	3% (상속 2.3%)	3% (상속 2.3%)
	주택 아닌 증여취득	3.5%	3.5%	3.5%	3.5%
	주택 아닌 상속취득	2.8%	2.8%	2.8%	2.8%
비조정 지역	주택 6억 이하	1%	1%	8%	12%
	주택 6억~9억원	1~3% (비율법)	1~3%(비율)	8%	12%
	주택 9억원 초과	3%	3%	8%	12%
	무상(조정 3억이하)	3.5%	3.5%	3.5%	3.5%
조정 지역	주택 6억 이하	1%	8%	12%	12%
	주택 6~9억원	1~3%	8%	12%	12%
	주택 9억 초과	3%	8%	12%	12%
	증여 · 무상(3억이상)	12%	12%	12%	12%
법인	주택취득	12%	12%	12%	12%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 · 경리 · 세무 · 재무 · 인사 · 노무 · 총무 · 법무 · 기획 · 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 · 보육 ·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 간 안 세 회 계 법 인 재 경 저 널

통권 1485 호 / 주간 39호

2020. 9. 23. (수)

· 발 행 인 : 이 윤 연  
· 제 작 :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목 차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안세 Taxpark의 차별화 특징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정전문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교론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정전략	주택과 아파트, 일반 부동산의 개인별 주택보유숫자에 따른 취득세율 (지방교육세 10%도 추가)	표지
긴 급 시 사 해 설	2020년 8월에 개정된 다주택 등의 취득세 요약(행정안전부 요약 내용)	2
C E O 에 세 이	발렌베리 가문이 존경받는 이유	5
세 무 · 회 계 상 담 자 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보상차원으로 받는 금전은 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 - 총당금은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산액으로 반영하는 것임 - 영세율매출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이면 증빙서류로 문제없음 - 매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차료 지급의 경우라면 별도의 임차거래로 인정됨	7 8
눈 에 맞 는 절 세 미 인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9
매 일 절 세 재 무 요 점	- 달라진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2020년)	11 12
직 장 인 Survival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열정	13
최 신 판 례 예 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707, 2020.02.28) -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 함 (사전법령법안-139, 2020.03.02)	14 15
세 정 뉴 스 와 해 설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5일까지 신고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흡수합병하면 합병법인의 전체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 함	14
세 무 정 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17 29 41
세 무 환 율 정 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0

# 2020년 8월에 개정된 다주택 등의 취득세 요약(행정안전부 요약 내용) 발췌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가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 취득세 요약

### 〈개요〉

원시 ·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 〈과세대상〉

토지 ·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 콘도 · 종합체육 시설이용 · 승마 · 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 · 차량 · 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등과 거래, 수입, 구매, 판결문 · 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 · 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신축)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외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①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 요약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유상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억 이하 : 1%</li> <li>• 6억 초과 9억 이하 : 1~3%</li> <li>• 9억 초과 : 3%</li> </ul>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4주택~	12%	12%
무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②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요약

구분	세율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3.5%
	비영리사업자 2.8%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③ 부동산外

구분	구분	세율
선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외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0%	
	경자동차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5.0%	
			경자동차	4.0%
		영업용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미등록 대상 항공기		2.0%	
	그 밖의 항공기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입목			2.0%	
광업권 · 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④ 중과세율

중과세대상		세율예시
대도시내 법인	①-1. 본점용 부동산 신 · 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 + (2\% \times 2배) = 6.8\%$ - 토지취득 : $4\% + (2\% \times 2배) = 8\%$
	①-2. 공장 신 · 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 + (2\% \times 2배) = 6.8\%$ - 토지취득 : $4\%(2\% \times 2배) = 8\%$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건물신축 : $2.8\% \times 3배 - (2\% \times 2배) = 4.4\%$ - 토지취득 : $4\% \times 3배 - (2\% \times 2배) = 8\%$
	②-2.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공장신축 : $2.8\% \times 3배 - (2\% \times 2배) = 4.4\%$ - 토지취득 : $4\% \times 3배 - (2\% \times 2배) = 8\%$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	- 건물신축 : 표준세율( $2.8\%$ ) $\times 3배 = 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 $4\%$ ) $\times 3배 = 12\%$
사치성 재산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건물신축 : $2.8\% + (2\% \times 4배) = 10.8\%$ - 토지취득 : $4\% + (2\% \times 4배) = 12\%$ - 고급주택취득 : $2-3\% + (2\% \times 4배) = 10-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표준세율( $4\%$ ) $\times 3배 +$ 중과기준세율( $2\%$ ) $\times 2배 = 16\%$
	법인 :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중과세율( $8\sim 12\%$ ) $+ 중과기준세율(2\%) \times 4배 = 16\sim 20\%$

#### 〈신고납부방법〉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월, 외국주소 9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발렌베리 가문이 존경받는 이유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보이는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이래 인류가 피땀으로 획득한 자유와 평등이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직업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 사실 문자를 배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오래전에 인기 TV 사극인 '제중원'은 개화기 때 드라마였다. 천민 백정의 아들이 천신만고를 이겨내는 눈물겨운 성공담이다. 주인공은 서양의사 1기인 7명중 하나가 된 후 독립투사로 헌신한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신분의 벽을 깨부시면서 이룬 인간 발현이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계급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11조 3항이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다. 누구나 그가 성취한 '훈장 등의 영전'은 그에게만 속한다는 것이다. 즉 옛날의 신분이나 계급처럼 세습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물론 선진국도 다 그렇다. 백작의 아들이 백작이 되지 않는다. 아예 작위가 없어졌다.

혹시 있더라도 장식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여왕과 가족들은 사실 관광자원이 아닌가.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 저절로 목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담임목사직은 꽤 세습되곤 한다. 막대한 재산과 숭배(?)받는 신분을 그대로 자식이 이어간다. 게다가 떼지어 파벌싸움을 해댄다.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공돌이 정신'인 장인정신으로 똘똘 뭉친 자동차회사 혼다는 세습경영을 애초에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로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유명하다. 친인척은 물론 자식들에게조차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혼다에는 혼다가 없다"는 명언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도요타와 수입차 양대산맥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유이기도 하다.

얼마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의 3세대 세습 CEO인 이재용부회장이 느닷없이(?)

또는 여려환경에 처해 "더 이상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긴 그의 자식들의 어머니는 이혼한 호남재벌의 3세대 딸이 아닌가. 복잡해 질 것이기에….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존경받는 최대 재벌이다. 1856년 창업주 앙드레 발렌베리는 은행을 창업했다. 그 후 2대 CEO 크누트, 3대 마르쿠스, 4대 피터, 5대 야콥 인베스터 회장과 마르쿠스 주니어 SEB회장에 이르렀다. 스웨덴의 '경주 최부자집'이다.

발렌베리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부모 도움 없이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해외유학을 마쳐야 한다. 또 해군장교로 복무한 후 다른기업에서 업적을 이뤄야한다. 이것이 최소 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이들끼리 경쟁을 벌여 후계자가 결정된다.

그룹 대부분의 수익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배당이익은 공익재단으로 보내어 스웨덴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위태위태한 북한의 김일성 가문도 김정일을 거쳐 3세대 김정은에게 세습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별난 대통령 트럼프와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북·미회담으로 세계의 뉴스꺼리를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한국의 기업들이 되기를 갈망한다.



## 보상차원으로 받는 금전은 매출이 아니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함

**Q** 납품처로부터, 투자금액에 대해, 납품단가로 인정되어 매월회수중인데  
납품수량이 당초계획보다 미달되어, 이에대한 보상차원의 생산차질비로 돈회수되었는데  
매출계산서 없이 금액만 회수시, 매출로 인식하여 잡을수 있는지요?

**A** 보상차원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이 없으므로 매출(수익)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  
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충당금은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산액으로 반영하는 것임

**Q** 회사가 대여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 예정입니다.  
1.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6월 30일자로 종료, 연장 계약은 미진행  
2. 소송은 현재 진행예정으로 소송접수 前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별도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회계상 충당금을 설정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회사가 설정한 충당금의 1%나 실적  
률의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자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추산액을 충당금으로 회계반영하는  
것입니다.

## 영세율매출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이면 증빙서류로 문제없음

**Q** 부가세 영세율-기타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인보이스 유상 1건, 무상 1건으로 발행하였고 이 건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을 합산하여 1건으로 발행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합산된 수출신고필증을 정상건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A** 영세유통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이면 문제없으므로, 귀사의 경우 합산된 수출신고필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신고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매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차료 지급의 경우라면 별도의 임차거래로 인정됨

**Q** 1억 5천만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4개월동안 임차료로 9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사항으로 4개월이상 사용시 나머지 6천만원 지급 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1. 구입하기로 했을 때, 회계처리 시 장비를 6천만원으로 자산인식을 할 지, 1억 5천만원으로 자산인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1억 5천만원으로 자산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앞 서 임차료로 인식한 9천만원을 수정분개 하여 마이너스처리하고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4개월간 임차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을 구입시점에 자산으로 수정분개하면 지난 4개월 간 사용한 것에 대해 비용인식은 전혀 없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되는데, 매매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시범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구입결정 시점에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임차료로 인식한 금액을 수정분개하여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매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매매하는 경우라면 임차료 지급한 것도 정상적 거래이고 이후 해당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임차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소유권취득하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데, 귀사의 경우는 4개월간의 임차료가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비해 너무 비싸므로 해당 임차료만을 매매와 상관없는 순수임차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한이 경과된 대금결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한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받게 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님

통상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상호 합의된 일정금액을 주고받거나, 지연기간에 약정된 이율이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의5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된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체상금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의 손금으로 반영

법인세법상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벌금·과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을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달라진 주택 취득세율 기준표

과세 대상		현행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4%	12%	12%
법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12%	

### 화

####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법안	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최고세율 3.2% → 6.0% 상향
소득세법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30% 포인트 인상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 20% 인상
지방세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취득세율 1~3% → 8%(2주택), 1~4% → 12%(3주택, 법인) 상향
부동산거래신고법	전월세, 보증금 지자체에 신고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자 최대 5년 거주 의무 부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4년 단기, 8년 장기 아파트 임대업 유형 폐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2020년)

항목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3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 120만원
등록단계	취득세	최대 90만원	최대 140만원	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최대 20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소계		최대 470만원	최대 840만원	최대 720만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주요 연혁

연도	전기자동차 〈제109조제4~6항〉		수소전기자동차 〈제109조제7~9항〉		하이브리드자동차 〈제109조제1~3항〉		
~2011년	-		-		• 신설('09년 7월) -2년 6개월	100만원	
2012년	• 신설(2012년) -3년 적용	200만원			• 일몰 연장(1차) -3년 연장		
2013년							
2014년							
2015년	• 일몰 연장(1차) -3년 연장	400만원		• 일몰 연장(2차) -3년 연장			
2016년							
2017년							
2018년	• 일몰 연장(2차) -3년 연장 -금액 상향	• 신설(2017년) -3년 적용		• 일몰 연장(3차) -3년 연장			
2019년		300만원					
2020년							
2021년	(일몰 연장여부 검토)		• 일몰 연장(1차) -3년 연장	(일몰 연장여부 검토)			
2022년	-						



##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열정

열정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꿈꾸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기업이 어떤 재능을 가졌냐보다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가졌냐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나폴레온 힐은 "나를 성공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힘은 제2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열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은 기업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이며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하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행운의 여신이 행운을 가져다주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정은 긍정적 에너지로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생각해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며, '할 수 없다', '불가능 하다'라고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건디 힘든 좌절을 이겨내게 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열정은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반대로 열정이 없는 기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기업으로 성공한 공병호 박사, 구본형 소장, 이장우 박사, 김미경 대표, 문성실 씨 등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열정이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보일지라도 마음속 꿈을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 최신 판례예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707, 2020.02.28

## 질 의

○○시의 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인원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기준고용인원 산정 방법

##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기준법령재산-11, 2020.02.27

## 질 의

- 농업인 甲은 2015.1.6. 경기도 ○○시 소재 농지 30필지(이하 W"쟁점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
- 이때, 甲은 쟁점농지 중 14필지를 담보로 농업에 채무 △,△△△백만원(이하 W"쟁점채무")이

있었는데, 해당 채무도 쟁점농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됨

- 농업회사법인의 정관(제7장 부칙)에 따르면, 현물출자 가액은쟁점농지 감정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함

질의내용

-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해당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도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 회 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Marketing Tax consulting

흡수합병하면 합병법인의 전체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사전법령법인-139, 2020.03.02

## 질 의

- A법인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24.을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로 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B법인을 흡수합  
병하였음

- 합병 전 A법인과 B법인은 관계기업(지분을  
85%)으로서 자회사 B법인은 A법인에서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업체로 합병 후 업종을 제  
조업으로 단일화 하였는바  
-합병등기일 이후 도소매업으로 구분되는 B사  
업부의 매출액은 없으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2019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 질의내용

- (질의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 방법
- (질의2)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  
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합병등기일 vs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 회신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  
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  
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  
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  
인-0527, 2019.9.4. 참조)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  
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  
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  
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  
2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  
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음**

서면국제세원-22, 2020.03.05

#### 질의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 정  
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거래  
가격을 조정하여 신고 등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내국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2.13. 대  
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  
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  
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상가격은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  
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중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5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을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앞서 8월 18일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 신고를 당부드리고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관세청, 추석 맞아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맞아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18시부터 20시로 근무시간을 늘려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은행 마감시간인 16시 이후의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하게 된다.

### 주택 양도세에 분양권도 포함... 취득시기 따라 달라

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0. 9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수)~10.5.(월)입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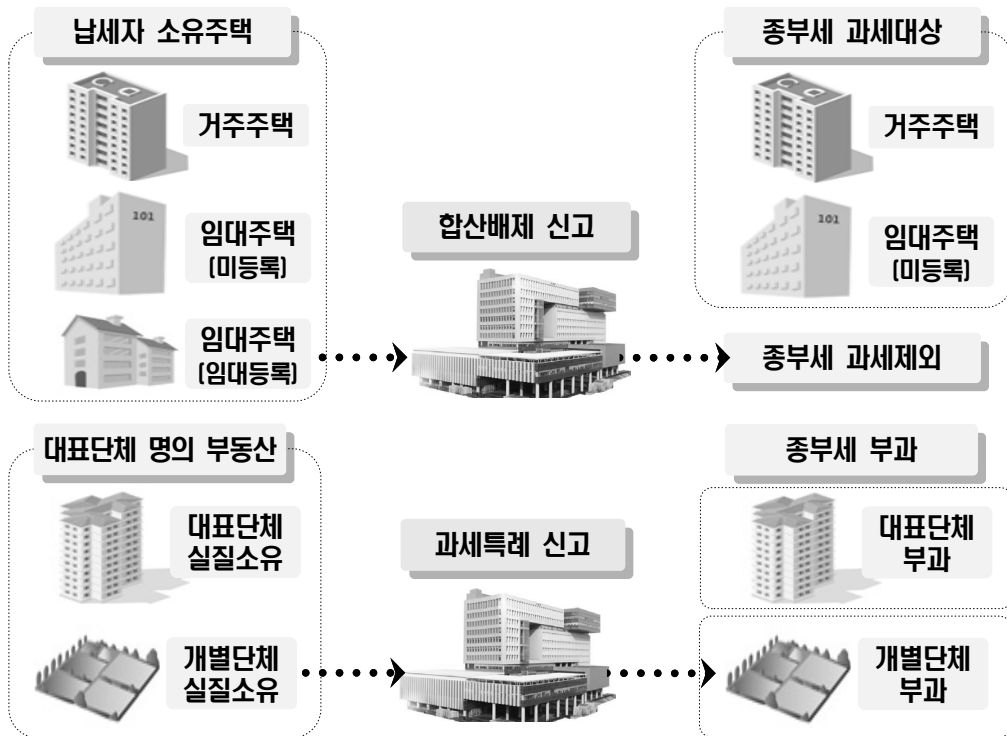


- '19년부터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바일 안내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 또한,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올해 개정('20.8.18.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21.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요건은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이하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를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이하 향교재단 등)로 등기된 부동산으로,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 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 3.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 신고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올해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증액제한 요건)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보증금 ↔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을 산정방법>**

- 인상률 = (갱신후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100
-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2) / 4%}
- \* 과세기준일('20.6.1.)의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산정률(3.5%)

- (위반 시 추정)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정됩니다.
  - \*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임무기간(5년·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합니다.
  - ①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8.18. 시행)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공인인증 > 신고 / 납부 > 일반신고 > 합산배제신고
  -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http://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

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

-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 또는 「홈택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 [www.nts.go.kr](http://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상세정보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

- 합산배제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26 (1번 선택 후 3번)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 없이 ☎ 126 (2번 선택 후 1번)

## 7.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①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②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 ④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붙임 1 -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 세 부담 상한 인상('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현 행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2주택	150%	150%	폐 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00%	
3주택 이상	300%	300%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1년 귀속분부터)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1년 귀속분부터)

-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공제한도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70% → 8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 붙임 2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과세기준일(6. 1.) 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으로서,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1)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2)	-	전국 1호 이상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1)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5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증가율 5% 이하4)
기존임대주택3)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	6억 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억 원 이하	10년 이상	-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억 원 이하	5년 이상	-

- 1) '18. 3. 31.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
- 3) '05. 1. 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 4) '19. 2. 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주요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사원용주택 유형	합산배제 요건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기숙사	·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	·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물변제 주택	·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	· '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	· 주택도시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





-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
  - 과세기준일(6. 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 붙임 3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 \*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이나 올해에는 9.30.이 공휴일(추석 연휴)이므로 10.5.(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⑥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⑦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25/100,000 가산

-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⑧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⑨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 '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 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 \*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20.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 불가

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19. 2. 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⑪ 신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 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⑫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 분	신고 서식
합산배제 주택	·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

-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⑬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 5.)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⑮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됨.
  - \* '18.4.2.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 가능

## 붙임 4 -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 6. 1.현재)

●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 다산동, 별내동 3)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18. 8. 28.
*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18. 12. 31.
*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국세청, 2020. 9

## ①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 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  
\* 세무조사 건수(건) : ('17) 16,713 → ('18) 16,306 → ('19) 16,008 → ('20 예상) 14,000 수준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 ②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 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제고  
\*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도입 등

## ③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

## ④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

## ⑤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 추진



## I. 회의 개요

- ◆ 국세청은 9. 15.(화)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서비스 세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성실납세하시는 국민을 위해 한층 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고충에도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민생침해 탈세 등 지능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II.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 1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도약을 위한 전방위 세정지원

### 조사부담 완화

- ✓ [조사규모]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규모 대폭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 ✓ [조사방식] 간편조사 적극 실시 및 정기 세무조사 비중 확대, 현장 세무조사 최소화

### 일자리 지원

- ✓ [고용유지] 최대3년간\* 세무조사 유예 ✓ [고용창출] 조사선정 제외 등 지원 확대

\* 고용안정협약 체결 중소기업 대상 \*\* 매출감감 등에도 고용유지하는 중소기업도 '21년 말까지 조사 제외

### 경제도약 지원

- ✓ [혁신 성장] 한국판 뉴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R&D 세액공제 심사 사례집 발간
- ✓ [수출·투자] 수출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투자 중소기업 조사선정 제외 추진

## 1.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 대폭 완화

- 세무조사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소 납세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연말까지 적극 집행하겠습니다.

## 2. 일자리 유지·창출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세정지원 추진

-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기발표)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 \* 노동자는 임금감소를 수용하고 회사는 일정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 이 외에도 매출감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를 지속 실시하고,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수입 금액 요건\*을 한시적 완화하겠습니다.
  - \* 근로자 수 2% 이상 증가 시 : (중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확대) 5백억원 미만

## 3. 경제도약을 위한 노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자유예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 (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세제혜택을 뉴스레터로 제공
-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운영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의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고, 다각적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 세무애로를 적시 해소하겠습니다.
- \*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도 과세권 확보 위해 적극 대응
- 수입금액 대비 투자지출 비중이 높으며 앞으로 투자확대 예정인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4.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포용적 세정지원 강화

- 장려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등으로 최대한 안내하고, 반기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 사례를 바탕으로 수급요건·정산제도 등을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제공
- 반기 정산에 따라 올해부터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유 및 고지유예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 환수발생 금액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장려금에서 가산세 부과 없이 차감하는 제도
- '20년 말까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고,
- 영세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역점 추진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한층 높이고, 민원·상담, 현장소통, 권익보호 등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1. 「홈택스 2.0」 추진을 통한 신고·납부 편의 획기적 개선

1. 통합 플랫폼 구축
  - 납세자가 신고안내문 확인부터 신고·납부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 신고·납부내역 등 단순 납세정보 제공 중심의 종전 My홈택스 서비스 전면 개편


- 고지내역 등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 신고, 납부 등의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클릭 시 해당화면으로 이동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모바일홈택스 전면 확대(200종 → 700여 종)를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 2. 이용 편의성 제고

-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AI 신고도움\*」 도입을 추진하고,
  - \* (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디에서? → 질문내용 분석 및 종합소득세 신고화면 연계 제공
- 세법중심의 도움말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 신고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문답형 신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 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전면 제거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홈택스 2.0』 구현을 통한 신고·납부 편의 획기적 개선		
	<b>통합 플랫폼 구축</b>	<b>이용 편의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돕는 맞춤형 <u>My 홈택스 고도화</u> 추진</li> <li>○ PC 홈택스 전면 <u>모바일화</u> 마무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도입 추진</li> <li>* 납세자 질문내용 분석 및 신고서비스 연계 제공</li> <li>○ <u>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u> 전면 제거</li> </ul>

## 2.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세상담 및 민원서비스 혁신

- 낮은 전화상담 연결율에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SNS 기반의 편리한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는 한편, 상담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담홈페이지\*」도 신설하겠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 리플릿 등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상담정보를 통합 제공
-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 3.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생소통 세정 구현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운영 과정에서 직능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 \*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서 세무애로 수집 및 지원방안 논의



- 영상회의를 통한 현장 간담회 개최, 온라인 민원창구인 고객의 소리(VOC) 운영 활성화 등 비대면 소통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소통·홍보 채널을 블로그 위주에서 영상매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용한 세무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 (예)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정보, 연말정산 절세전략, 주택 관련 세금정보 등

#### 4.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

-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조사 절차준수 여부 및 사후 만족도를 평가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 현장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정사례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 권익침해 우려가 큰 세무조사 관련 사안을 보다 심층 검토하기 위해 지방청 납보위원회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3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 국세청은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고액체납도 현장추적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1.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 엄단

-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NTIS 정보분석을 고도화하여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공직경력 전문직 가운데 고의적으로 수입 및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에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활용하여 집중 검증하겠습니다.

##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고질적 탈세 엄단

### 민생침해 탈세

- ✓ 서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등 탈세 강력히 대응  
\*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NTIS 정보분석 고도화, 엄정한 범죄조사 시행 등

### 신종 유통·자료상

- ✓ 신종·호황 유통업체 단계별 추적조사,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 강화

### 공직경력 전문직

- ✓ 공직경력 전문직의 고의적 소득탈루는 현장정보·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집중 검증

## 2.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

-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겠습니다.  
\* 등기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활용
-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하겠습니다.

## 3. 공정경제 실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 총력 대응

-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적 부(富)의 대물림 등에 대하여 탈세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업종이 제도권 내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세무의무를 안내하면서 탈루혐의에는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외환수취자료 및 지급명세서 자료 연계 분석,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활용 등

## 4.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

-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고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한층 높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취약분야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 I 신종 역외탈세 중점 검증 유형 I

- |                   |                        |
|-------------------|------------------------|
| ① 해외현지법인과 우회·변칙거래 | ② 해외투자 위장 기업자금 유출      |
| ③ 비영리법인의 부당 이전거래  | ④ 조세회피처 다단계 구조 이용 소득은닉 |

- 조세조약·세법을 악용한 국제적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전략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 5. 고액·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은닉재산 철저히 추적·환수

-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재산은닉에 대하여 기획분석 및 현장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 중심으로 수색·압류, 추적조사 등 강력 대응
- 친·인척 금융조회 등 확대된 체납징수 인프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 등 운영도 준비하겠습니다.
-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15년 일본 국세청과 최초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 다양한 국가로 확대 추진

## 4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 국세청은 적극행정 및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의 변화기대에 부응하고, 국세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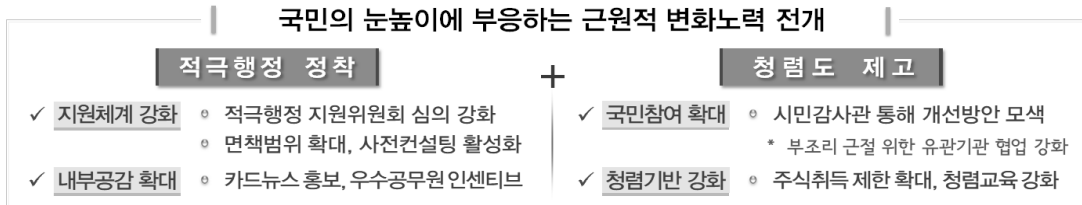
## 1.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

- 행정편의 관행, 소극행정 행태에서 탈피하고,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새로운 조직문화로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한 현안심의를 강화하고, 심의에 따른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겠습니다.
  -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적극행정에 대한 내부공감 확산을 위해 카드뉴스 등으로 홍보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2.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당당한 청렴문화 조성 노력 전개

- 국세공무원의 인식·관행까지 근원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진정성 있는 청렴노력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 외부위원 중심의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청렴도 취약요인을 심층 진단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18.9월에 출범한 자문기구로서 국세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기적 논의
- 직무관련 주식취득 제한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렴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3. 일 한 만큼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평가체계 구축

-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고 묵묵히 일하면서 헌신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성과 우수자에 대한 근무평정 가점 부여, 비선호 분야 장기근무자 인사상 우대 등
- 하위 직급에서 공직을 시작하더라도 역량을 갖추어 고위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인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 현장 직원의 업무 노력도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일선 공감대가 낮은 지표는 폐지·보완하겠습니다.

## 4. 공감·소통 기반의 수평적 조직문화로 국세행정 경쟁력 제고

- 관리자와 직원이 함께 세정현장 문제를 고민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의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여
-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된 ①신고창구 운영 개선, ②전화·방문민원 효율화, ③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을 집중 논의하겠습니다.

- 관리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소통·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소통노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비대면 팀빌딩 프로그램 운영, 회의문화 개선, 역(逆) 멘토링 제도 운영 등

## 5.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

- 집약근무제도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보다 활성화하고, 재충전을 위한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등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 장려금 반기신청 도입 등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으나 인력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를 선별하여 현장인력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 \* 아울러, 지방청의 기능 분석 및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보강도 병행 검토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서별·분야별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과학적 인력재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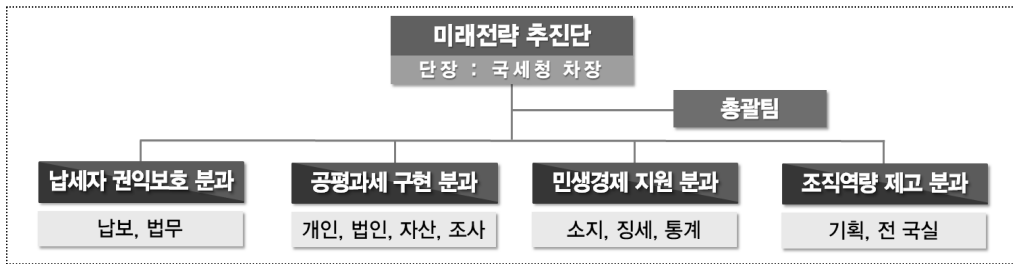
## 5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1.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구성(안)

- ◆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미래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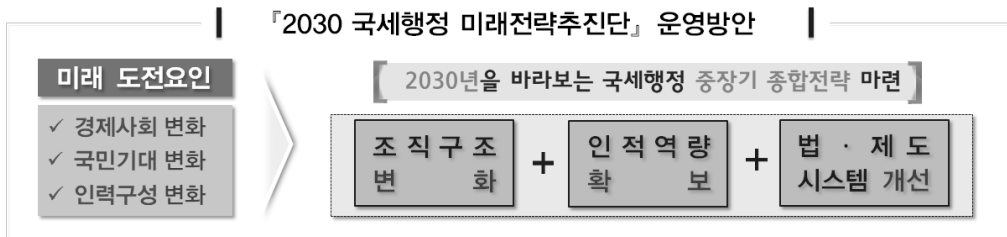
#### 1. 추진단 구성(안)

-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며,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을 위한 분과를 구성하고,
  -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2. 추진단 운영방안(안)

- 경제·사회 여건 변화 뿐 아니라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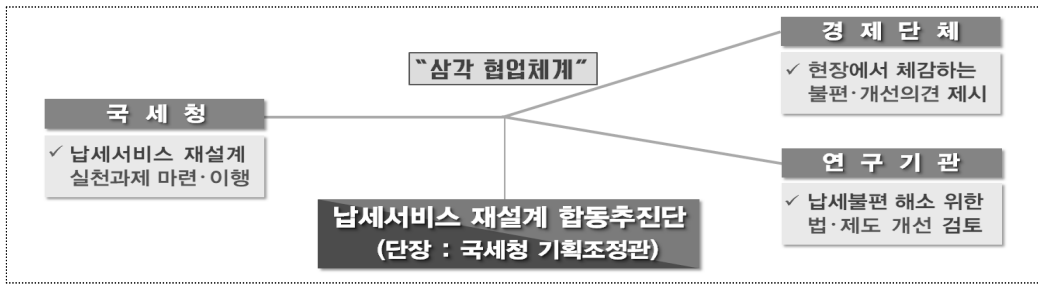
## 2.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안)

- ◆ 국세청은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근본적 변화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등
  - 국민 관점의 납세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1. 추진단 구성(안)

- 경제단체(예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2. 추진단 운영방안(안)

### < 내용(contents) 재설계 >

-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신고안내문 등 도움자료의 이해도 제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 절차(process) 재설계 >

-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실효적 개선방안을 집중 마련하겠습니다.

\* (예) 연말정산 시 의료비 등 도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11일(금)	9월 14일(월)	9월 15일(화)	9월 16일(수)	9월 17일(목)
미 달 러 (USD)	1185.30	1188.30	1184.20	1180.50	1177.80
일 본 엔 (JPY)	1116.57	1119.77	1119.97	1120.07	1121.66
영 국 파 운 드 (GBP)	1518.78	1522.15	1521.52	1521.49	1526.72
캐 나 다 달 러 (CAD)	898.91	901.32	898.65	862.18	893.83
홍 콩 달 러 (HKD)	152.93	153.32	152.80	152.32	151.97
위 안 화 (CNH)	173.39	173.81	173.45	173.90	173.88
유 로 화 (EUR)	1401.80	1407.60	1405.23	1398.72	1391.16
호 주 달 러 (AUD)	861.06	865.44	862.63	862.18	860.09
싱 가 폴 달 러 (SGD)	865.78	868.77	867.90	867.47	866.89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4.65	286.10	285.66	285.80	285.15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 국세청, 2020. 9

- (결과 개요)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신고인원 증가이유)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낮아지면서(10억 원 → 5억 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5~10억 원) 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있었고,
  - \* 5~10억 원 구간 969명이 신고하여 작년 신고자(755명) 대비 214명 증가
-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도 일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포상금 안내】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 제보는 최고 20억, 구체적 탈세혐의 등 병행 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1.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 1.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 (24.0%)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하였으며,
- －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하였습니다.

####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명, 개, 조 원)

구 분	2020년			2019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전 체	2,685 (24.0%)	18,566 (14.9%)	59.9 (△2.6%)	2,165	61.5
개인	1,889 (28.6%)	7,467 (32.4%)	8.0 (25.0%)	1,469	6.4
법인	796 (14.4%)	11,099 (5.6%)	51.9 (△5.8%)	696	55.1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2. 신고인원 증가 이유 등

-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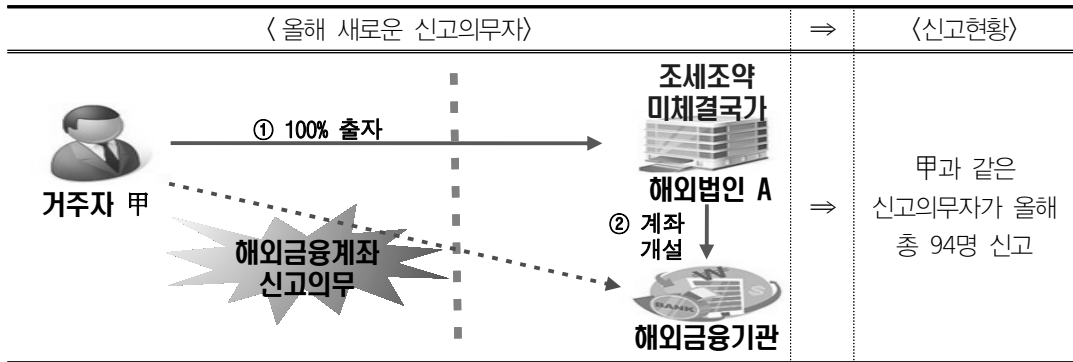
#### 《5~10억 원 사이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작년/올해》

(명, 개, 억 원)

구분	인 원		계좌 수		금 액	
	'19년	'20년	'19년	'20년	'19년	'20년
합 계	755	969	2,468	3,136	5,365	6,819
개 인	627	794	1,873	2,382	4,463	5,628
법 인	128	175	595	754	902	1,191

- －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 올해 제도변경에 따른 신고인원 증가 》



- 이와 같은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 외에도 인원이 증가(212명) 한 것은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2.6%) 하락하였습니다.
- \*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19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출처: 한국신용평가)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 하락

## 2. 신고 내용 분석

### 1. 평균 신고금액과 가장 많이 신고한 금액구간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하였는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계좌 유형별 신고현황

- (올해 신고금액)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 (48.8%),



-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추세)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감소(2.5조 원)하여 최근 3년 간('18~'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증가(1.2조 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데,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3. 국가별 신고현황

- (개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신고현황)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작년(2.7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습니다.
- (법인 신고현황) 법인이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으로,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 3. 올 하반기 미신고 혐의자 검증에 주력할 예정

### 1.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명, 억 원)

부과연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上
인 원	382	20	35	43	40	24	47	53	62	40	18
과태료 부과액	1,125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124

- (형사고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가능)될 수 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 고액(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인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수정(기한후)신고자의 명단공개 제외, ② 제도 도입시기 차이, ③ 불복 진행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외결정에 의한 것임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형사고발 · 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上
형사고발	58	-	-	1	7	18	12	11	9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한편, '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 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2. 미신고 혐의자 검증계획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가 관련 소득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

- ① 대재산가 甲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계좌 및 관련 국외금융소득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증여세 탈루까지 확인하고 소득세·증여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 ②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인 乙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를 UAE 계좌 등에 예치하고, 계좌와 국외근로소득 미신고 ⇒ 세무조사로 소득세 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천만 원 추징
- ③ 대자산가 丙은 스위스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거액의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파생된 이자소득과 해당 계좌 미신고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 과정에서 국외금융소득 누락까지 확인되어 소득세 00억 원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 추징, 형사고발

-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



- 역·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 해당 지역·국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

#### 4.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10~70% → 30~90%)되어,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금액》

구 분	수정신고 시점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	1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90%
	6월 초과 1년 이내	1월 초과 6월 이내	과태료 금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6월 초과 1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50%
	2년 초과 4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과태료 금액의 30%

※ 단 국세청 해명안내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감경 제외

####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적인 신고안내와 제도홍보 등으로 신고의무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자체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도를 통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붙임 1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 근거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0조의3, 제51조

● 신고제도 개요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등)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 신고의무자

- (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

---

## 붙임 2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 지급하는 제도

##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기관 명칭,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누리집\*,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http://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탈세제보신청하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